

---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계 4대 의제[안]

---

2022. 6. 23.



# 목 차

## I. 기업의 법 준수환경 조성 및 법·제도 개선방안(노사 공동 의제)

- 1. 산업안전보건 법·제도 정비 ..... 1

## II.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노사 공동 의제)

- 1. (공공) 안전·보건관리자 지원 ..... 3
- 2. 노사정 산업재해 예방 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 5
- 3. 산재예방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 6

## III.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 1.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
- 2. 산업재해조사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

## IV.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방안

- 1. 노동조합(노동자)의 안전보건 활동 확대 ..... 12
- 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협력 사업 ..... 13

[별첨] 한국노총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혁신사업(동영상 포함)

# I. 기업의 법 준수환경 조성 및 법·제도 개선방안

## 1. 산업안전보건 법·제도 정비

### <1> 현황 및 문제점

-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74%를 발생하며 '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대상으로 현행과 다른 지원이 절실한 상황
  - 소규모 사업장의 대부분이 안전보건 법·제도를 미적용 받은 상황으로서 기초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대다수인 실정
- (정부 이행 미흡)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부가 주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사업들이 안전보건공단 등에 위임되어 진행되거나 과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합의된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일반회계 확대의 경우 과거 3차례의 합의가 있었으나 오히려 후퇴(표면적인 금액은 늘어났으나, 합의 사항인 비율은 감소)

### ※ 산재예방기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산재예방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기금지출 총액 (순지출)	47,155	49,846	51,694	53,128	59,509	64,496	70,770	80,990
산업재해 예방 지출액	4,389 (9.3%)	5,032 (10.6%)	5,086 (9.9%)	5,035 (9.4%)	4,785 (8.0%)	5,055 (7.8%)	6,481 (9.2%)	9,770 (12%)
일반회계 전입금	155 (0.32%)	155 (0.31%)	155 (0.30%)	155 (0.29%)	155 (0.26%)	155 (0.24%)	155 (0.22%)	163 (0.20%)

- (안전보건 법·제도) 계속되는 대형사고에 사후조치의 하나로서 안전보건 법·제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보호 대상을 넓혀지는 등 긍정적인 점도 있으나, 원안에서 후퇴하거나 법률 등이 제·개정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음
  - (도급) ▲유지·보수작업 등에 대한 도급인의 의무가 50억 미만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법 적용제외 ▲적정비용, 공기 보장, 적격 수급인 심사·선정에 대한 의무 없거나 부실

- **(작업중지)** 하위법령에서 ‘급박한 위험’, ‘동일한 작업’,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설명 등이 부족하여 현장 작동성이 떨어지며 노동자의 사전예방적 작업중지와 작업거부가 미약
-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그 자체의 미실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규범력이 미약함과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안전보건교육)**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양질의 교육여건 조성이 어려우며 교육 자체의 세밀함과 체계적인 부분이 부족함

## <2> 개선방안

### □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지원 확대

- **(법·제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입법 방향·법 집행·해석 등의 기준 제시 ▲산안법의 목적을 정비(사업주의 자율안전 추가) ▲일부 행정질서벌을 행정형벌 조항으로 전환(안전보건관리체제 등) ▲도급, 작업중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제도 정비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30~50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지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종 확대, 관리감독자 내실화 등)
- **(예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컨설팅 노사단체 참여를 통한 시설개선,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 **[별첨]** 한국노총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혁신사업(동영상)

### □ 합의 이행 TF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운영

- **(합의 이행 노사정 TF)** 지난날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 등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노사정 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선별 및 연차계획을 구성하여 합의를 이행
-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TF)** 노사가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공동발굴하고 협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정부, 국회 등에 제출하여 노사의 이견이 적은 개선과제를 먼저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발주자 책임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안전보건교육 강화 ▲벌금의 하한선 설정 ▲인과관계추정 규정 도입 ▲정부의 지원 강화

## Ⅱ.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 1. (공공) 안전·보건관리자 지원

#### <1> 현황 및 문제점

##### □ 현행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30인 이상 사업장이나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에 의해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선임기준이 완화('97년 이후 25년 동안 변화 없이 존치 중)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300인 미만 사업장은 위탁제도에 의해 안전·보건관리자가 70% 이상 위탁되어있는 상태
-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20인~49인 1)일부 업종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선임신고의 의무가 없으므로 통계조차 없음

##### □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각지대 방치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조직이 전무한 상태
- '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대상임으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
-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제도가 있으나, 전체 271만개 사업장 중 10% 정도 일회성(1년 단위 2~3회)으로 지원
  - ※ 안전보건공단 '21년 2)공공위탁(민간재해예방기관) 약 19만개소(48만회)
- 전체 271만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200만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67만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미흡

#### <2> 개선방안

##### □ 공공 안전·보건관리자 지원

- (지원 대상) 기존 선임 의무가 있었던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 안전·보건관리자를 지원

1)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2) 안전, 화학, 건설, 서비스, 밀착지원, 보건

- ▲ 1차 대상 : 완화된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
- ▲ 2차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지원(규모, 업종 등 고려), 최종적으로는 전체 사업장을 지원

○ (지원 방식)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각각 월 1회씩 지원 실시

- ▲ 1인당 사업장 수는 80개소를 기준으로 가감 격월 점검을 원칙으로 80회/월 점검
- ▲ 사업장에서 요구(신청)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재원으로 지원

○ (지원 기구) 각 지역별, 권역별로 안전·보건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보건공단 하부조직 형태 또는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운영

- ▲ 정부의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를 통한 재원마련 및 산재보험 기금도 출연
- ▲ 기존의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사업을 폐지하고 공공 안전·보건관리제도 일원화
- ▲ (노사참여) 기구의 권역별 노사단체를 활용하여 사업장 참여 유도

○ (지원 비용) 30~49인 사업장(42,992개소)을 대상으로 인건비 추산(월 단위)

구 분	30~49인 사업장(개소)	안전·보건관리자(명)	수가	월 비용추산(원)
	42,992	538	안전 : 6,300원	169,470,000
			보건 : 7,200원	193,680,000

- ▲ 30~49인 사업장 47,506개소 중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해외 파견자, 주한미군 등) 제외한 42,99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 1명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일일 4개 사업장을 월 1회 방문, 20일 기준으로 월 80개 사업장을 관리

## (세부 논의과제)

- 공공 안전·보건관리자 지원제도, 기구 설립(구성원, 규모, 재원 등)
- 공공 안전·보건관리자의 지원 대상 추산
-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횟수, 형태 등 중소규모 사업장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기존 지원제도와 지속 가능한 차별화)

## 2. 노사정 산업재해 예방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1> 현황 및 문제점

#### □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역할 제고 및 기능 분리

-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는 산재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를 근간으로 하는 위원회로서 산재예방 및 산재보상이 합쳐져 있어 산재예방 사업의 논의 기구로서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지원제도 등의 실행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정부의 형식적인 의견청취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현장작동성 있는 정책과 예방대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감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기존과 심의위원회의 논의 기구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재예방 및 감소를 위한 노사정 정책 심의 기구가 필요함

### <2> 개선방안

- (노사정 산업재해 예방 정책심의회 구성·운영) 노사정 사전적인 협의를 통한 심의로 정부 정책, 지원제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방향성을 설정하여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정 심의

### (세부 논의과제)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한 노사정 정책, 예방사업 등의 심의위원회 구성
- 사전적인 협의를 통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의 집행 담보
-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심의, 의결 기구 설치



### 3. 산재예방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 <1> 현황 및 문제점

- **(산재예방 행정체계 개편현황)**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행정체계의 개편 방향은 2020년 4월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바가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2021년 7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출범을 통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 개편의 방안 세부 내용에 있어서 인사구조, 조직구조 등의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
  -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역의 역할분담을 포함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
- **(현행 산업안전보건본부 조직현황)** 현재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행정조직은 2정책관, 9과, 1팀으로 전문성에 기초한 업무체계의 구성이 아니고 기존의 '국'체계에서 중처법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로 확장한 형태로 기능상의 발전은 없고,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과는 거리가 있음
  - 인사 조직구조의 개편을 사후 감독을 지양하는 형태로 합의하였으나, 자율적 예방 조치 지원보다는 중대재해 수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음
- **(기존의 산재예방체계로는 안전선진국 수준의 도달 한계성 노출)** 현재의 산재예방 체계는 1981년 산안법이 제정 당시에 만들어져서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만 골격과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
  - 재래형 사망사고는 여전하고 대형사고는 지속 발생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은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 고용노동부와 공단 등에 대한 역할을 재설정함으로써 산재예방 정책의 현장작동성 강화 및 예방체계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필요
- **(중처법 현장정착을 위한 전문화된 대응체계 구축 필요)** 중처법 정착·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로 전환하고 산재 사망사고의 약 40%를 차지하는 5인 미만의 중처법 사각지대 영역까지 지원체계 확립 필요

## <2> 개선방안

-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역할분담 체계) 감독과 예방 기능을 분리
  - (노동부)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기능
  - (공단) 고용노동부의 보조적인 기능 수행의 한계를 넘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자적인 예방서비스 수행

## (세부 논의과제)

-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감독기관으로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 고용노동부 수사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독립기관으로 개편 및 전문가 확보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정리 및 역할 재정립 필요 등에 대한 내용
- 안전보건공단의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으로 개편

### Ⅲ.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 1.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 산업재해 예방대책 기능의 상실

- 산안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이 함께 진행하며 재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은 재해발생 경위와 원인 등의 내용을 담은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함
- 하지만, 동종·유사재해 예방과 현장개선에 필요한 재해조사 의견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범죄 수사 과정의 근거 자료로만 활용되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재해조사 의견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 중심으로 작성되다 보니 재해의 직접적 원인, 기술적 요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되나, 재해의 간접적 원인, 구조적 요인 등의 기술은 미흡하며 조사 범위도 협소함

###### □ 재해조사자 의견 누락

-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 목적은 재해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함
- 하지만, 일부 재해조사 의견서에서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기술되고 있으나 정작 조사자의 의견이 누락되어 있거나 간략히 작성되고 있음
- 재해조사의 목적이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있음을 감안하면 조사자 의견은 모든 의견서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법 위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중대재해 발생 원인 분석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기술적 조사는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이 수행하고 있어, 근로감독관의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역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의 조사 권한의 한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중대 재해에 대한 사고원인조사 실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고원인을 분석·조사하는데 상당히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사 권한이 없어 사고원인과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에 한계가 존재함

## <2> 개선방안

### □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및 활용 방안

- 재해조사 의견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및 동종재해에 대한 예방 가이드로서 노동자, 기업 등 현장에서 재해조사 의견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 마련
- 재해조사 결과보고서와는 별개로 학계 및 전문가들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검토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 의견서 공유 시스템 구축 방안도 고려
-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 시 재해의 직접 원인과 기술적 문제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직접 원인과 기술적 문제를 유발한 간접 원인과 구조적 요인을 상세히 파악하여 재해조사 의견서에 기술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문화할 필요

- **(재해조사자 의견 반영)**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 재해조사 시 재해발생의 명확한 원인과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반드시 의견서에 기술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문화할 필요

-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전담팀 구성)**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과 같이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적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근로감독관 중심의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전담팀을 신설하여 기술적·구조적 재해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위탁 및 권한 부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위탁을 받아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이 현장 재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개선

## 2. 산업재해조사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 산업재해조사표의 목적

-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한 산업재해조사표의 정책적 목적성 부합 여부를 재검토
- (사업주) 산재발생 시 그 개요(육하원칙)와 재발방지대책을 사업주가 정확히 작성·제출함으로써 자체적인 원인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
- (정부) 산업재해 발생 후 즉각적이고 정확한 발생통계 생산(공식통계 생산까지의 시간 차이 최소화)
  - 신속 정확한 산재예방 정책 자료로 활용(산재예방 정책의 효율성 확보)

#### <참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3조)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방관서에 제출
- \* (주요작성 내용) 사업장정보, 재해정보,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일시, 장소, 작업유형, 당시 상황, 원인), 재발방지계획
- 2014년 동 제도 도입 이후 2020년까지 제출 현황

(건)

구분	2014년 (하반기)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체	16,647	55,926	61,075	56,040	61,928	70,453	74,770

#### □ 산업재해조사표의 문제점

- 방법 : 양적·질적 분석을 통한 현실태
  - ▲ (양적분석) 성실성 및 제도준수 여부
    - ↳ 제출된 조사표의 공란 여부 및 사고발생 후 조사표 제출까지 소요 일수 여부
  - ▲ (질적분석) 작성된 조사표의 질적 충실성
    - ↳ 질적자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계량적 평정(4점 척도)을 통한 검토
- (양적분석 결과) 제출된 자료의 성실성은 적정하나, 사고발생일과 산업재해조사표 접수일까지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 ▲ 사고발생 후 10~30일 이내 제출하는 자료가 상당수 → 즉각적인 통계생산의 목적

성에 미부합

- (질적분석 결과) 전반적인 조사표 작성 수준이 평균 이하(1.6점대/4점 척도) 수준으로 산재발생의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수준
  - ▲ 제조업, 건설업, 기타의 사업순으로 평정 점수가 낮음
  - ▲ 규모가 작을수록 평정 점수가 더 낮음
  - ▲ 사업장에서 산재발생 관련 육하원칙 개념 적용에 어려움
  - ▲ 재발방지 대책에 관리적·기술적 원인을 제시하는데 어려움(대부분의 재발방지 대책이 휴식, 보호구 미착용, 스트레칭 등으로 제시)

## <2> 개선방안

### □ 산업재해조사표 제도 개선방안

- 즉각적이고 정확한 산재보고 체계구축이라는 정책적 목적성 부합을 위해서는 정부는 예방사업 중심기관(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산업재해조사표의 산재예방 사업화를 통해 조사표 제도의 활성화 필요
- (현행) 제출의무 공지 이외에 관련 활동이 전무한 상황, 부정확한 조사표 보고내용을 토대로 발생통계 자료를 생산(산재예방 정책 활용도 전무)
  - ▲ (노동부) 조사표 접수 수준의 업무
  - ▲ (공단) 단순 통계자료 생산(산업재해 원인분석) 수준의 업무
- (개선) 해당 제도를 산업예방의 한 방법으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조사표 작성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발생통계 자료 생산 및 적시 산재예방 사업의 기반자료로 활용(궁극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
  - ▲ (노동부)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처벌에 집중
  - ▲ (공단) 조사표 접수 및 작성방법에 대한 지원(사업장 역시 산재예방의 중요한 주체라는 분위기 형성), 조사표 접수 및 즉각적인 통계생산을 통해 적시

## IV.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방안

### 1. 노동조합(노동자)의 안전보건 활동 확대

#### <1> 현황 및 문제점

- 제도적 제약과 인식의 한계로 인한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여건 미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현장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조합(노동자)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임
  -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은 아래와 같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측 위원으로 회의참석과 안건준비,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산안법에서 유급처리 가능)
    - ▲ 산안법상 근로자 대표의 동의·입회·의견청취: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시 동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안전보건진단 입회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선임된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사실상 사업주의 동의나 허가가 있어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가능)
  - 현행 산안법상 노동자 참여제도를 도입해 산재예방 활동을 강구하고 있으나, 제도적 제약과 인식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노동조합(노동자)이 타임오프 제도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노동자)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시간 보장이 필요함

#### <2> 개선방안

-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노동조합(노동자)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노동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함
  - 위험성평가 또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노동조합(노동자)이 참여하여 산재예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할 필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사업장 범위를 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기업 자율적 활동 장려수당 지급 및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한 개선 검토
  - 안전보건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한 안전보건 활동 시간 확보 및 보장 필요

## 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협력 사업

### <1> 현황 및 문제점

-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적인 안전보건의 미흡함)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초체계 전반에서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실정임
- 소규모 사업장은 국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인력과 자본력의 부족, 생산 위주의 활동, 사업 중심의 경영 체제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 및 안전보건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정부·공단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사업만으로 부족하며 노·사의 역할이 필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 의지'와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대립적 노사관계 틀을 탈피하여 노사가 사업장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필요

### <2> 개선방안

-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
  - 노사단체가 협력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줌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전예방함
  - 동시에 중처법 준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도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노사단체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
- 노사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
  -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클린사업,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지원하는 방안 고려
  - 산업재해 예방사업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를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정적 지원 강화 및 확대



□ **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컨설팅 내용**

- 현장개선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평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기반 마련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기술지도 및 조언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활동 전개의 계기 마련

□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방향성 제시)** 사업장 내 노사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

## ○ 사업개요

- 한국노총은 2021년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주)진영 프로토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혁신사업을 실시함
- 사업 수행 인력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함(산업안전보건분야 공학 석·박사 3명)
-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평가, 위험성평가 및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
-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 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실제 현장개선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함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활동

### (1)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평가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등 실태 파악
- 사업장 안전보건 서류 점검, 작업 현장점검 등 안전보건진단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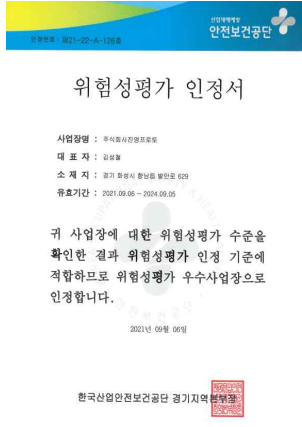
사업장 현장점검 및 실태 파악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서류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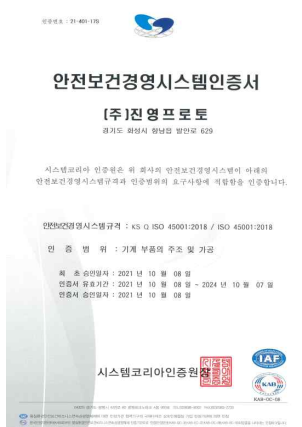
### (2)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인정

- 작업공정 현황 파악 및 유해위험 작업공정 분석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및 현장개선 지원 활동 연계하여 재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심사 및 인정

	
위험성평가 교육 및 컨설팅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및 인증

- 외부 안전보건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 기술표준원 산하 인증기관의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ISO 45001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컨설팅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 (4) 현장개선 지원 활동(지원범위: 전액 지원)

- 사업 예산 범위 내 사업장 요구에 따라 현장개선 실시(예산: 5천만 원)
-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작업공정 개선
- 인터뷰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만족도 제고
- 연삭기 덮개, 띠톱기계 방호장치 등 33종류 안전설비 설치 및 지원
- 별도 안전보건공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설명 및 신청지원(현재 설비 지원 완료)



항 목	개선 전	개선 후
옥외변압기 방호울		
발끝막이판 설치		
수직사다리 추락방지울 설치		
천정크레인 훅 해지 장치 설치		

항 목	개선 전	개선 후
연삭기 덮개 설치		
탁상드릴 안전커버 설치		
띠톱기계 방호장치		
바닥 에폭시 페인트 도장공사		

## ○ 사업효과

- (주)진영프로토 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과정에서 ISO 45001 인증 과정이 매우 어려웠으나, 인증을 통해 기업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것과 지속가능한 안전보건경영 전개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 또한, 인증을 위해 현장 작업자의 참여도를 높여 안전 준수 및 위험 개선 활동이 전사 차원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향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노사인식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 봄
- 본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의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인증을 위해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가 함께 공유하는 등 본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가능성 및 효과성을 볼 수 있었음



## ○ 사업 관련 언론 보도 내용


행정안전부

# 안전신문


안전보건공단

---

[뉴스](#)
[기획](#)
[오피니언](#)
[포토뉴스](#)

Q
A
≡

▶ [홈](#) ▶ [뉴스](#) ▶ [산업안전](#)

## 한노총,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혁신사업 성과 알려

▲ 정민혁 기자 | © 입력 2021.11.19 15:32 | 댓글 1

☰   ∞   가   가

**보호 ‘사각지대’ 사업장 대상 사업... 대상 기업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 컨설팅 받았다”**



**안전보건 혁신사업의 목적**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및 재해 예방  
 안전문화를 개선하고 확산하기 위함

/ 사진 = 한국노총 유튜브 브 일무리.


### 많이 본 뉴스

- 1 현대차 임직원 ‘애플카 내부정보’ 이용...  
[▶](#)
- 2 월주 대명병원 개발사업 두고 정치중화...  
[▶](#)
- 3 급식실에도 작업환경측정해야... 산안법...  
[▶](#)
- 4 ‘법원상 100여건’ 여천NCC, CEO 2명 모...  
[▶](#)
- 5 국민의힘 입재학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자...  
[▶](#)
- 6 윤화섭 범시민후보 ‘상륙속역 뺀진 GTX...  
[▶](#)
- 7 식약처, 쿠팡우유 등 식품위생법 위반 74...  
[▶](#)
- 8 ‘디지털자산 금융 국제중심지 제주’ 세미...  
[▶](#)
- 9 시민단체들, ‘수도권매립지일부개량안’ 결...  
[▶](#)
- 10 민주당, 윤화섭 쉐 안산시장 공천 배제...전...  
[▶](#)
- 11 [기고·감상평]코로나19가 지구인들에게...  
[▶](#)
- 12 ‘영령 사상’ 여천NCC, 117건 법위반... 추락...  
[▶](#)
- 13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일본 사례보니... ‘도...  
[▶](#)
- 14 5타워 세입자들 ‘인전 남용구형, 소유주...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된 한국노총의 안전보건 혁신사업 성과가 보고됐다.

## [김기찬의 직격인터뷰] “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약속, 희망 고문만 하다 끝나”

입력 2021.11.19. 오전 12:35 | 수정 2021.11.19. 오전 6:58 | 기사원문

 김기찬 기자 >

18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선 다소 이례적인 광경이 연출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주)진영프로토 사에 한국노총이 감사장을 전달했다. 그것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안전 컨설팅을 받은 데 대해서다. 한국노총은 올해 초부터 6개월가량 이 회사의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도를 분석하는 한편 개선책을 제시했다. 안전 위험요소를 모두 바꿨다. 덕분에 이 회사는 10월 8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받았다. 한국노총은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게 조용히 진행했다.

고용노동부가 이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다. 스스로 (예방사업을) 하기도 힘들다. 그런 곳에 한국노총이 안전보건 컨설팅을 한다니 놀랍다. 노동단체가 산재 예방의 주도세력으로 변신하는 모습이 아주 반갑다”고 말했다.



≡ 전체메뉴    특집    리포트    인터뷰    오피니언    포토    주요 제조업 전망    노동+

🕒 2022-05-16 17:15 (월)

HOME > 특집

### [커버스토리③] 안전에 시스템을 입히는 방법

👤 박완선 기자    🕒 승인 2022.04.14 00:01    🕒 수정 2022.04.14 00:03    💬 댓글 0

#### 사례2 ㈜진영프로토

#### 소규모 사업장, 이렇게 준비하면 좋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유예한다. 하지만 산업재해 대부분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 사망의 80.9%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곳은 50인 미만 사업장일 수 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진영프로토를 찾아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다.

진영프로토는 자동차, 선박, 의료 기기에 들어가는 시작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목형, 주조, 가공, 납품까지 시작품\*을 만들고 팔기 위한 모든 작업을 종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한국노총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혁신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선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부와 외부 안전 전문가가 컨설팅 팀으로 참여했고, 진영프로토에서는 박동진 생산관리 공정개선팀 이사 등이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소나 개발실에서 시험용으로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부품 및 기계의 동작과 기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만든 샘플



**‘작업환경 개선’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까지**

진영프로토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됐다. 하나는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물리적 공간의 변화다. 다른 하나는 ‘ISO 45001’이라는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진영프로토 사업장 현실에 맞게 안착시키는 것이다. 전자가 사업장의 하드웨어적 변화라면 후자는 사업장의 소프트웨어적 변화다.

작업환경 개선은 기계 설비 교체에서부터 방호 장치 설치, 바닥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에폭시 시공까지 넓게 진행됐다. 심지어 공구 적재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적재대를 교체했다. 작은 부분인 것 같아도 제조 공장의 경우 특히 중요한 지점이다. 박동진 이사는 “정리정돈만 잘 돼 있어도 사고가 잘 안 난다”며 “정리정돈이 안 되고 공구와 자재가 널브러진 작업 공간에서는 동선이 꼬여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작업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노총과 산업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았다.

ISO 45001 인증은 ISO 45001 매뉴얼에 따라 진영프로토가 준비해야 할 법 준수 사항, 예산과 인력 및 조직 구성 등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진영프로토 임직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외부 안전 전문가의 도움이 있었다.

**현장 작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중요하다**

박동진 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과정에서 ISO 45001 인증 과정이 제일 어려웠다고 소회했다. 작업환경 개선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외부 업체에서 바꿔주는 것이지만, 인증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기업 자력으로 해야 했기 때문이다. 매뉴얼을 읽어 보며 진영프로토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어려웠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겪을 수 있는 고민이기도 했다.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인적,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한 인력 배치와 조직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동진 이사는 이번 사업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ISO 45001 인증이라고 꼽았다. 기업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장 작업자의 참여도를 높여 안전 준수 및 위험 개선 활동이 전사 차원으로 진행된 것도 한몫했다. ISO 45001 인증을 위해서는 노동자 참여를 보장이 필수적이다. 진영프로토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의 법적 의무는 없었으나 인증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장에서 설비 속도가 너무 빨라 작업 안전을 위해 속도가 느린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올라왔다. 현장 작업자들의 말하지 않았으면 감지하지 못했을 부분이었다.

**경영자의 생각이 중요하다**

박동진 이사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을 ‘경영자의 마인드’라고 했다. 경영자의 의지가 없으면 회사의 관리체계 내로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동진 이사는 “작은 업체들은 따로 안전관리자가 없고 관리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데, 대부분 안전 서류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며 안전에 예산을 투여하고 담당 조직을 구성하려면 경영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렇다면 경영자의 의지를 올리는 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 박동진 이사는 ‘사업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넷 강의만 틀어놓으면 되는 형식적인 교육 말고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사업주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 사업 관련 영상

- 별도

## ○ 2022년 한국노총 안전보건 혁신사업

- 50인 미만 비제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 진행 중
- 건축물 일반 청소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상시 노동자 수 10명인 사업장

## ○ 기타

- 중소기업 사업장 규모별 차별화된 정부 지원 정책 마련
  -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기술지원 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 등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는 다른 사업에 비해 큼
  - 재정지원 사업 중에서도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과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는 크며 두 지원사업은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함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두 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원이 가장 많은 지원사업은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지원 사업이지만,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재해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상시 노동자 규모에 따라서 살펴보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 지원사업은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원품목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용자 등 금전 지원은 비교적 규모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별) 차별화된 정부 지원 정책 방안 마련 필요성 논의
- \* 예로, 전체 270만 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70% 이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산재 감소의 실효성 있는 정책 파악 및 예산 편성, 지원 등 활성화